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 크다... 답방 성사 이뤄진다면?

'KTX 타고, 한라산도 가고' ... 깜짝 행보 '관심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답방이 성사될 경우 김 위원장이 남한 어디에 발자취를 남길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분단 70년 만에 북한 최고지도자의 첫 남한 방문인 만큼 김 위원장이 찾게 될 장소는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동시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박8일 간의 해외 순방 기간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북한 최고지도자의 역사적 방문 가능성에 군 불을 지켰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아 북측에 제안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북측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뤄 답방 가능성에 상당히 무게가 실린다. 언제든 답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용하고 은밀하게 만전을 기할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가 외부 귀빈들을 맞는 장소로 사용되는 부속건물인 상춘재에 대한 보수 작업에 착수한 것도 남북 정상 만남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질 경우 남북 모두 경호 문제를 가장 관심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인 이목 집중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 KTX에 직접 오를 가능성

문 대통령과 백록담에 올라 손 맞잡으면 남북관계 이정표

산업 현장 시찰 빼놓을 수 없어... IT 현장 택할수도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주로 청와대 경내에서 정상회담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김 위원장이 방남과 함께 공식 환영식 장소로 경복궁이나 창덕궁, 덕수궁 등 한국 대표 궁궐이 거론된다. 고궁은 외국 국민 방문시 손꼽히는 방문지였다. 올해 9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방한 시 창덕궁에서 공식 환영식을 갖기도 했다.

수도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 타워나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최대 관광시설인 마리나베이샌즈의 스카이라프 전망대를 들른 바 있다.

남산 타워나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해 서울시민 앞에 깜짝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에서 깜짝 외출에 나서면서 현지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12시간 앞둔 시점에서 김 위원장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북한이 남북 경험 사업 중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철도 연결과 관련, KTX에 직접 오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동생인 김영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1부부장으로부터 KTX에 대한 정보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정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특사로 방남, 서울~평양 간 KTX로 타고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시절 고속철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어 북한에 고속철을 놓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의 방남 기간 최고의 관심은 한라산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백두산 방문을 제의했고, 두 정상 내외는 나란히 민족 화합의 상징인 백두산 천지에 올라 큰 울림을 안겼다.



평양남북정상회담 3일째인 지난 9월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가 백두산 천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한라산 백록담에 함께 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하며 후남을 기약했다. 두 정상이 한라산 백록담에 올라 손을 맞잡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한다면 남북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주를 김 위원장의 모친인

고영희의 고향이기도하다. 김 위원장 외가의 가족묘지가 제주에 있다. 한라산 방문과 함께 제주 지역을 둘러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월 중순 한라산 정상에 올르는 예측하기 어렵다. 강풍과 함께 폭설이 내리는 날엔 헬기 이착륙이 제한되기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경제 발전 의지가 강한 김 위원장으로서 산업 현장 시찰은 빼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세계 추수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방북에 동행했다.

당시 북한이 기업인들의 방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 만큼 이번 방문에서는 다양한 산업현장 시찰도 예상해볼 수 있다.산업현장을 돌아보게 된다면 수도권에 위치한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북한이 IT 분야 육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어 IT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산업현장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날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 등 북한 김 위원장의 현장 시찰 장소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15만 명의 평양시민 앞에서 연설한 데 대한 상응한 조치로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도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다. /김진성 기자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469조6천억'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올해보다 40조 증액

정부 제출안보다 9264억6600만원 감액

'쟁점' 일자리 예산 ↓ 단, 부족시 예비비로 지원

남북협력기금 ↑... 교통·안전 등도 증액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예산 공고안 상정·의결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469조5752억 원 수준의 '2019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회는 이날 오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212명,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 원 규모였다. 양당은 4조2983억 원을 증액하고 5조2248억 원을 감액해 9264억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 5751억 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놓았다. 올해 예산안 428조8339억 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일반·지방행정 1조3578억7900만원 ▲사회복지 1조2153억2000만원 ▲외교·통일 1220억4000만원 ▲교육 2865억8100만원 ▲통신 349억8000만원 ▲국방 21억5600만원 등이다.

증액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 1029억7700만원 ▲환경 2495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 1387억2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220억4000만원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52억 9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14억 8100만원 ▲농림수산 877억4000만원 ▲과학기술 354억3600만원 ▲보건 318억 1400만원 등이다.

협상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 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반면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8800만원에서 223억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년 3600만원에서 437억5000만원이,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2700만원에서 412억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 4300만원에서 400억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등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

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2일)보다 12시간 가량을 넘겨 처리됐다.

지난해에 이어,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것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 4조원을 문제 삼았고 바른미래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과 함께 예산안과 선거제 개혁의 연계처리를 강조하면서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이 법정시한(12월2일)을 엿새 지나 통과됐지만,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오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예산 공고안 및 배경계획'을 상정·의결하기로 했다.

이내년 국무총리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 가결 직후 정부 측을 대표해 "일자리 여건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한경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내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본회의 통과 '윤창호법' 완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날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이 완성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석 158인 중 찬성 143표, 반대 1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윤창호법인 특가법 개정안은 찬성 248표, 반대 0표, 기권 2표로 지난달 국회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량이 높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어 뇌사상태에 빠진 후 결국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김진성 기자

'유치원 3법' 처리 사실상 무산

한국당 반발 임시회 처리 불가피

정기국회내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했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유치원 회계의 교육목적(교비·일반) 외 사 용시 처벌 규정 개정 등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 간사들이 다시 협의하기로 했지만 개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 한 관계자는 8일 뉴스에 "오늘 여야 간사들은 못 만난다. 약속 잡은 것이 없다"며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임시회 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최대 쟁점인 사립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회계에 속하는 수입과 재산의 교육목적 외 사용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잠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곡상도 한국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는 돈에 대

해 형사처벌하지는 것으로 민주당안을 상당히 수용했다"면서 "이 부분(학부보 분담금)은 성격이 다르다. 행정처분 등 제재 방법이 있으니 형사처벌까지는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 이원화도 거부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꼭 의원의 반발에 대해 "김한표 한국당 간사가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저와 조승래 민주당 간사가 논의한 것과 달리 해석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처벌 유예기간이 1년 6개월이 든 2년이면 그때부터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저와 조 의원은 해석했다"며 "김 의원은 그때 가서 시행할지 말지를 논의하지는 것이니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 그것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유예기간 도입에 대해 "현장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분회계를 여전히 유지하자고 말한다. 계속 평행선"이라고도 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하지고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장은성 기자